

유류세 인하 압박... 코너몰린 정부

휘발유값 59%·경유값 50%가 세금 덩어리 정부 세수 확보위해 “내릴수 없다” 입장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열되고 있는 기름값 논쟁에서 정부사들의 마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 관련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지만 각계의 공격이 만만치 않아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기름값은 세금 덩어리=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을 1ℓ 당 1천496.4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전 가격은 616.07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80.33원은 세금으로 교통세 526원, 주행세 139.39원, 교육세 78.9원, 부가가치세 136.04원 등이다. 휘발유 가격의 58.8%가 세금이고 경유 가격의 세금 비중도 50% 수준에 달해 기름이 아니라 '세금 덩어리'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이런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OECD 회원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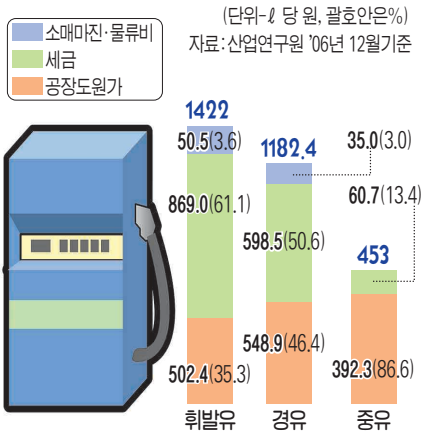
일본(41%), 호주(38%), 캐나다(31%), 미국(14%) 등은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프랑스(67.3%), 영국(64.7%), 독일(63.1%) 등은 우리나라보다 휘발유 가격의 세금 비중이 높다. 경제 수준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유류 관련 세금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본 31, 호주 29, 캐나다 28, 미국 17 정도이고 GNI를 감안한 휘발유 세금 수준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일본 23, 호주 19, 캐나다 15, 미국 4 등에 불과하다.

◇세금값이 유가 내려도 수요 급증했다= 정부는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가격탄력도가 상당히 높아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만큼 유류 소비를 촉진한다고 보고 있

■석유제품 원가 구성



다. 하지만 경제연구소 등의 연구 결과는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 산업연구원(KIET)이 2003년 외부 연구용역 결과로 내놓은 '차량연료간 적정가격 비율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휘발유의 단위 수요탄성치(절대값)는 0.167~0.209였고 경유의 탄성치는 0.240~0.244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장기 수요탄력성은 0.061~0.079였고 경유는 0.079~0.093로 단기보다 더 낮았다. 탄성치가 1을 넘으면 탄력적이고 1에 미

달하면 비탄력적이어서 휘발유와 경유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비탄력적인 상품으로 가격 변동에 대해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류세 10% 인하하면 세수 2조원 감소 = 결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유류세를 인하할 때 줄어드는 세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한 교통세, 특세,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세수를 2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세가 138조원 건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가 국세의 17%를 차지하는 셈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교통세와 특세세율을 10% 인하하면 주행세와 교육세 인하 분을 포함해 전체 세수는 1조9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유류세를 10% 내리도 소비자 가격 인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름값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세수도 함께 줄어들어 '비전 2030' 등 돈을 많이 쓰는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중·일 산업전시회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07 한·중·일 산업전시회'가 개막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각국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국의 기계·전기전자·자동차 분야의 중소기업 부품소재를 전시하는 산업관과 국가별 테마를 설정해 홍보하는 홍보 테마관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제조업체 10곳중 3곳 적자

내수경기 회복조짐 불구 30%는 이자감당도 못해

내수경기의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 제조업체 10개 가운데 3개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체의 3분의 1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1천506개 상장·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가운데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0% 미만인 적자업체의 비중은 1분기에 29.5%를 나타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0~10%인 업체 비중도 48.6%에서 46.2%로 하락한데 반해 20% 이상 고수익을 내는 업체 비중은 7.1%에서 8.3%로 상승했다.

일부 호황업종에서 고수익을 내는 업체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업종은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조사대상 전체 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9%로 작년 1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으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0.8%포인트 떨어진 7.9%에 그쳤다.

한은은 "작년말에 비해 올해 3월말 환율

이 상승하면서 순외화환산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은 오히려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제조업 전체로는 작년 1분기 553.1%에서 올해 1분기는 612.1%로 개선됐다.

대형마트 “연내 추가출점 자제”

중소유통업체와 상생 협력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외에 연내 추가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점지역의 상품구매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중소기업과는 유통업체 자체상표(PB)상품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8개 대형마트 대표들과 식품공업협회 등 업계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주 장관 주재로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유통부문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그러나 이 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 즉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의 비중은 32.0%에서 35.7%로 상승했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업체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에 25.1%에서 28.1%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무차입기업의 비중은 9.6%에서 9.8%로 상승,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증권 계좌 하루 1만개씩 ‘쑥쑥’

올 초보다 14.2% 늘어

증시 호황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몰려 들면서 활동 증권계좌수가 하루에 1만개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계좌수가 덩달아 급증하고 신용융자 잔고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개인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증권협회에 따르면 국내 활동 계좌수는 올해 초 816만개에서 이달 8일 기준 932만개로 116만개(14.2%)가 늘었다.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간 거래가 없었던 휴면계좌나 예탁

자산이 전혀 없는 폐쇄계좌를 제외한 실제 활동 중인 증권 계좌를 활동 계좌라고 부른다. 올 들어 이달 8일까지 증권사의 영업일수가 109일이므로 하루 평균 1만640개의 활동계좌가 새로 생겨난 셈이다.

적립식 펀드 물풍의 주역인 미래에셋증권의 활동계좌수가 올해 초 59만3천개에서 82만개로 22만7천개 늘어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증권협회 관계자는 "코스피지수가 신기록 행진을 재개한 지난 5월부터 신규 계좌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8월에 사상 최초로 활동 계좌 1천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친환경 축산농가에 현금방식 지원

정부가 환경 친화적 축산에 힘쓰는 농가를 직접 현금지원(직불제) 방식으로 보조한다.

또 조제 분유 안전성 검사 항목에 식중독균인 '비실러스 세레우스'를 포함시키고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적용을 확대하는 등 축산물 위생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육밀도 ▲가축분뇨 자원화 ▲약취관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환경친화 축산

농장'을 지정하고 이들에 3~5년동안 직불제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사육을 위한 살비 투자 등으로 생산비가 늘고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또 이 농장들 가운데 항생제를 쓰지 않거나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따로 3~5년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사육 농가의 절반 이상을 HACCP 적용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유통과 판매 단계를 포함한 전체 축산물 관련 시설 기준으로는 20% 이상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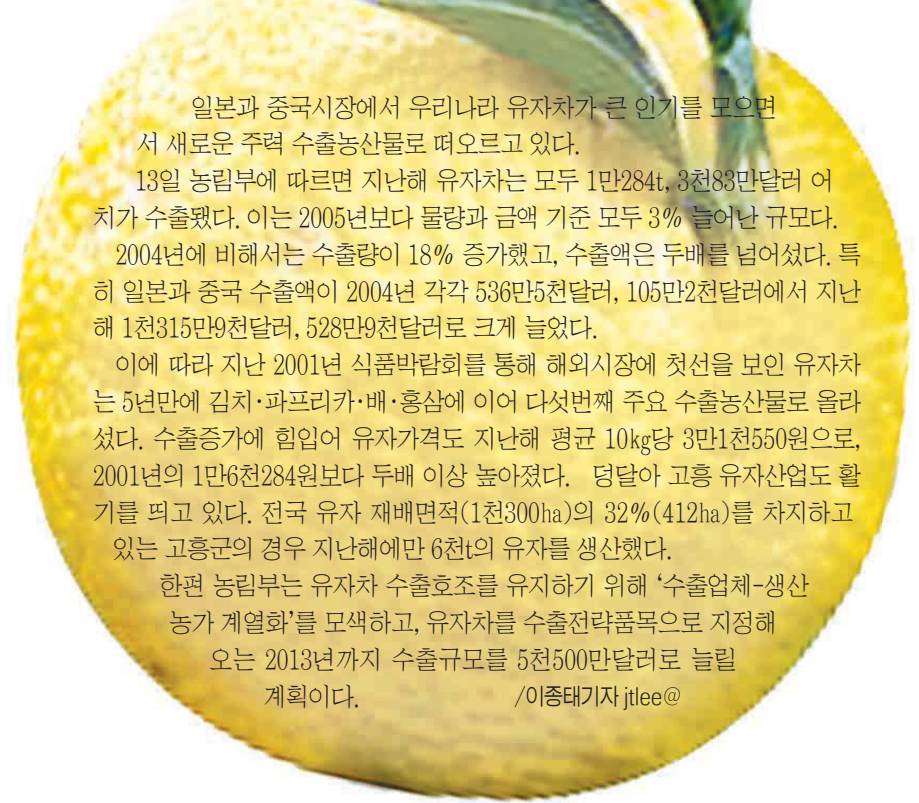
수산업 부가가치 9조3,037억 순수 어업생산의 4.3배 달해

수산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순수어업생산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를 추계한 결과 어업생산을 포함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총 부가가치는 2005년 기준 9조3천377억원으로 전체 산업 총 부가가치의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업 관련 산업의 총 부가가치 9조3천377억원 중 순수 어업생산의 부가가치 1조7천290억원을 제외한 다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7조5천747억원으로 순수 어업생산 부가가치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 부가가치를 보면 수산유통업이 2조1천11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어망생산업 등 수산물 투입업이 1조8천628억원, 어업생산업이 1조7천290억원, 수산물가공업이 1조5천609억원, 수산외식산업이 1조1천895억원, 수산업 관련 서비스와 지식산업이 6천981억원 등이었다.

유자차 中·日서 ‘히트’

지난해 1만여 수출... 고품농가 고소득 기대



일본과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유자차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새로운 주력 수출농산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자차는 모두 1만284.3천83만달러 어치가 수출됐다. 이는 2005년보다 물량과 금액 기준 모두 3% 늘어난 규모다. 2004년에 비해서는 수출량이 18% 증가했고, 수출액은 두배를 넘어섰다. 특히 일본과 중국 수출액이 2004년 각각 536만5천달러, 105만2천달러에서 지난해 1천315만9천달러, 528만9천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식품박람회 통해 해외시장에 첫선을 보인 유자차는 5년만에 김치·파프리카·베·홍삼에 이어 다섯번째 주요 수출농산물로 올라섰다. 수출증가에 힘입어 유자차가격도 지난해 평균 10kg당 3만1천550원으로, 2001년의 1만6천284원보다 두배 이상 높아졌다. 덩달아 고품 유자산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전국 유자 재배면적(1천300ha)의 32%(412ha)를 차지하고 있는 고품군의 경우 지난해에만 6천의 유자를 생산했다.

한편 농림부는 유자차 수출호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업체-생산 농가 계약화'를 모색하고, 유자차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해 오는 2013년까지 수출규모를 5천500만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반FTA 파업 절차상 문제 있다”

자동차 4사 노조위원장, 금속노조 결정에 반기

산별교섭 결렬선언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가 불참했다는 이유로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산별노조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임금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업주들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벌이는 조직 형태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12일 사용자협의회와 제4차 산별교섭을 가졌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지지 파업 등에 대해 공방만 벌어다 교섭을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 산하 220여개 사업장 중 90여개 사업장(조합원 2만2천여명)이 소

속된 사용자협의회측은 이번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들이 나올수 있는 여건과 명분이 조성돼야 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14만3천여명의 60% 수준인 8만5천여명이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 4사에 소속돼 있지만 완성차 4사는 산별교섭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완성차 4사 등 대기업들은 그동안 산별교섭과 관련해 이종교섭과 이종과업을 가장 우려해왔으며 노조측이 한미 FTA 지지 파업 등과 같은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별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별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7월중 산별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총파업 등 강경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